

총무원장 자승스님 ‘명진스님 임기보장’ 재차 확인

‘봉은사 문제’ 중재 나선 불교계 단체 잇따라 면담

승가단체

명진스님 대응방식 지나치지 않

‘징계 바람직하지 않다’ 의견도

방하고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는 약 1시간 가량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서 스님들은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한 종단의 해명 △중회에서 절차를 거쳤지만 봉은사 신도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던 점 △명진스님의 대응 방식이 지나쳤지만 명진스님에 대한 징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총무원장 스님에게 전달했으며, 이에 대해 총

10여개 단체

봉은사와 ‘조건없는 대화’ 요청

안대표·한나라당에 사과 촉구

무원장 자승스님은 “명진스님의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뜻은 변함없다”면서 “사태를 잘 마무리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계 사회단체 실무자들도 지난 25일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종단과 봉은사가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총무원장 스님 예방에 앞서 대한불교청년회 등 10여 개 불교계 사회, 신행 단체들로

는 구성된 불교단체연석회의는 서울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사무실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안상수 원내대표의 발언과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날 연석회의는 안상수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장에게 명진스님의 거취를 거론한 것은 종단의 자주성을 훼손한 망언”으로 규정하고 “안상수 원내대표의 사회와 공직 사퇴, 한나라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에 대해서도 연석회의는 “총무원과 봉은사는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아무런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면서 “불교시민단체들도 출세가 지도자들의 중재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가운데)은 지난 25일 불교계 승가단체의 예방을 받고 ‘명진스님의 주지 임기 보장’ 등 입장을 피력했다.



불교계 사회단체 실무자들이 지난 25일 총무원장 자승스님(왼쪽)을 예방하고 봉은사와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종진 스님들 노력 도법스님 등 대화...사실상 중단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종산스님)와 중앙종회(의장 보선스님)도 잇따라 입장을 표명하고, 사태 확산을 우려했다. 원로회의는 지난 24일 의장단 간담회를 갖고 “조속한 시일 내에 모든 문제가 마무리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종회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 승인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음을 강조하면서 “종도에게 심려를 주고 사회에 오해를 던지는 것은 누구도 원치 않으며,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중앙종회 의장 보선스님은 “지난 3월19일 명진스님을 만나 대화했을 때는 이같은 사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모든 오해가 해소되어 종단이 본래 임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선스님은 “종

총무원 ... 중재하는 스님들 의견 ‘존중’ 입장

명진스님 ... 직영철회 등 3가지 선결 조건 제시

단과 종도들, 그리고 국민들에게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우려와 함께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24일 오전부터 수경스님(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도법스님(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지홍스님(서울 불광사 회주), 정휴스님(중앙종회의원) 등이 잇따라 명진스님과 총무원장 스님을 만나 중재를 제안했지만 명진스님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총무원장 스님과 봉은사 주지 스님을 만난 스님들은 “더 이상 종단이 사회의 지탄을 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양측이 대화를

통해 종단 내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총무원은 “중재하는 스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명진스님이 ‘직영사찰 지정 철회’ 등 3가지 선결 조건을 제시하여, 이날 중재는 사실상 중단됐다.

한편 봉은사 문제와 관련 교계에서는 ‘법정스님 임적’이후 한국불교의 위상이 높아지고, 불교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고조된 상황”이라면서 “이러한 때 직영사찰 지정 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갈등이 증폭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성수·염태규 기자

“직영사찰 지정철회 촉구” 봉은사신도회 입장 발표

서울 봉은사의 직영사찰 지정과 관련된 봉은사 신도회(회장 송진)가 지난 25일 경내 범람루에서 ‘직영사찰 지정에 대한 봉은사 신도의 입장’을 발표하고 봉은사 직영 철회를 촉구했다.

봉은사 신도회는 “봉은사 사부대중과 소통없이 졸속 추진된 봉은사 직영 철회와 함께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등 당사자들은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왜곡하거나 직영을 강행할 경우에는 봉은사 신도들은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향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인택 기자 parkintak@bulgyo.com

조계종 지방 승가대학(강원)이 신입 학인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4월초 입학식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강원외의 경우 모집 인원이 평년의 절반이나 3분의 2에 그쳐 강원 운영에 차질을 빚을 우려다. 출가자 수 감소가 눈에 보이는 원인이지만 승가대학 제도 개편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평년 ‘절반’ ...4월초 입학식 지방 강원 학인모집 어렵다

해인사승가대학장 법진스님은 지난 25일 “예년 같은 40명 정도 선에서 치문반(1학년)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현재까지 입학 신청한 학인이 20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특히 “불교계 신문 광고 등 학인 모집을 위해 전년보다 훨씬 많은 홍보비용을 썼음에도 실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학기 중 퇴방자도 고려하면 10명 남짓 남으리란 관측이 다.

적지 않은 강원들이 동일한 고민을 안고 있다. 통상 20명 가량의 신입생을 받는 통도사승가대학에 알아보니 아직 10명에 불과하다. 최대 사미니 강원인 운문사승가대학 또한 신입 학인 규모가 60명에서 43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운문사승가대학의 한 강사 스님은 “본래는 당해 연도 구족계 수계산원

강원들은 겨우 명맥을 이어가는 수준이다.

학인 감소의 원인은 출가자 감소가 결정적이다. 2003년 기초교육을 수료한 사미니계 수지자는 2003년 216명에서 2009년 171명까지 떨어졌다. 무엇보다 사미니계 수지자의 감소는 사문 충격적이다. 2003년 157명에서 2009년 88명으로 6년 동안 절반 가까이 줄었다. 기본교육을 받아야 할 예비승이 태부족하니 신입 학인 모집에 애를 먹는 것은 당연지사인 셈이다.

• 19곳 중 8곳 하한선 못미쳐

조계종 교육원은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강원외의 난립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고 있다. ‘승가대학령’은 학년 당 5명, 전체 20명으로 인원의 마지노선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못 미치는 강원외 전체 19개 강원 가운데 8개나 된다. 전체 학인 수가 고작 7명인 사미니 강원도 있다. 교육부장 법진스님은 “최소

출가자 감소...군소 강원 정비 과제 고령화 추세...기본선원 쏠림 현상도

에서 구족계를 수지하는 스님들은 받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금년엔 이들의 입방도 허락해야 할지 재고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역사가 길고 규모가 큰 강원들의 사정이 이러하니 작은 강원들의 수급난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 6년 동안 감소 추세 ‘고민’

종단 통계자료를 확인한 결과 강원외 교직자 스님들의 걱정이 기우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입학생을 비롯한 강원외의 재학생 수는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해인사승가대학의 1학년은 2007년 29명, 2008년 20명, 2009년 14명으로 계속 감소했다. 통도사승가대학의 1학년 역시 22명(2007), 20명(2008), 9명(2009)으로 하강 국면이다. 운문사승가대학 또한 63명(2007), 40명(2008), 38명(2009)으로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신입생 숫자가 평균적으로 한 자릿수인 군소

인원도 채우지 못하는 강원외를 전문교육기관으로 전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가자의 감소에 함께 고령화도 문제로 불거지면서 발생하는 현상도 짚어야 한다. 나이든 출가자들이 위계가 엄격한 강원외의 공동체생활을 기피하면서 동국대와 중앙승가대, 기본선원 등 운신외 비교적 자유로운 여타 기본교육기관으로 몰린다는 것이다. 특히 기본선원 학인의 숫자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게 교육원의 판단이다. 전 통도사승가대학장 우진스님은 “기본교육기관을 통합한 뒤 적어도 학년별로라도 집체교육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10일 출범한 승가교육진흥위원회(위원장 자승스님·조계종 총무원장)는 오는 4월5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현안에 대해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장영설 기자 fuzel@bulgyo.com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과 관련한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의 입장

중앙종회는 조계종단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총무원의 중무 집행을 견제하는 데의 기구입니다. 따라서, 중앙종회의원은 종도를 대변하여 대의를 구현하는 권리와 의무를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본분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회로까지 회자되는 금번 봉은사의 직영사찰 지정은 중앙종회가 총무원의 중무 집행에 대하여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승인하여 의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봉은사의 직영사찰 지정이 본질을 벗어나 ‘외압’이나 ‘부적합’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하여 왜곡되는 현상에 깊은 유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중앙종회의원들 스스로 판단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써 결의된 사안조차도 세간의 권력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중앙종회의 권위와 중앙종회의원들의 자주성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2005년 11월에 열린 제169회 중앙종회 정기회에서도 봉은사를 직영사찰로 지정할 것을 건의하는 결의를 한 바가 있음은 본 사안이 지극히 합당한 종단 내부의 의지와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은 종단 내의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것이기에 어떠한 외압도 있을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중앙종회는 ‘외압’이라는 왜곡된 주장 자체가 오히려 외부의 간섭을 초래하는 언행이라고 단정하며, 이를 근거로 공연히 일부 언론과 정치권이 유입되어 종단의 사안이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종도들의 뜻을 존중하여 현재의 언행을 자제하고 중앙종회의 민주적 절차와 의결에 대한 훼손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봉은사가 직영사찰로서 어떻게 종단 차원의 가치와 목적을 실현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총무원은 제183회 중앙종회가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 승인을 의결한 결정에 따라 그 집행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중앙종회는 직영사찰 지정 승인의 의미가 올바르게 실현되도록 지적과 조언에 충실할 것입니다.

종도에게 심려를 주고 사회에 오해를 던지는 것은 누구도 원치 않으며, 일어나서도 안되는 일입니다. 시시비비할 가치도 없는 주장으로 일반 사회의 곡해를 부추겨 중앙종회는 물론 종단 전체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계속된다면 더 이상 중앙종회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기2554(2010)년 3월 25일

☉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